



주간통일정세 2013-24(2013.06.10 ~ 06.1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2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평양 체육시설 시찰...장성택 수행(6/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에 새로 건설된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능라인민체육공원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학교가 축구선수 후진을 양성하는 전문체육학교인 것만큼 과학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교육해야 한다면서 "이 학교에서는 국제경기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칠 축구선수 후비(후진)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라며 "후방공급사업을 잘하라"고 지시함.

- **北 노동신문, '마식령 속도' 정신 대대적 선전(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1면 사설과 2면 정론은 물론 3, 4면에 이르는 각종 기사에서 '마식령 군인 건설자의 투쟁정신'과 '마식령 속도'를 거듭 강조함.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곡식을 정성껏 가꾸자'라는 제목의 사설은 "농업 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마식령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2면 '진취적인 일군이 되자'라는 제목의 '정론'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서 발휘되고 있는 군인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나가자는 우리 당의 의도와 결심을 깊이 새겨" 각 단위에서 정해진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는 '진취적인 일군'이 돼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대장 진급(6/11,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0일 발표한 '최고사령관 명령 36호'에서 "인민보안기관과 인민내무군은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혁명의 쌍기둥을 이루는 2대 무장집단"이라며 최 부장에게 대장 군사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전함.

- **北 김정은, 평안북도 유리공장 현지지도(6/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의 대관유리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대관유리공장에서 광학측정기재의 성능이 작년보다 좋아졌다고 격려하고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자동화를 실현하고 설비와 재료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말함.

● 北 김정은, 6·25 때 김일성 머물던 곳 찾아(6/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 창성군 유평리에 있는 '유평혁명사적지'를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사적지를 방문해 "창성 땅은 수령님(김일성)의 전승 업적과 관련한 뜻 깊은 사적이 많은 곳"이라며 "올해는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 체결·1950년 7월27일) 60돌이 되는 해인데 꼭 오고 싶었다"고 말함.

■ 김정은동향

- 6/10,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능라인민체육공원 시찰(6.10,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장성택·리영수·박춘홍 등 동행
- 6/12,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기념관 건설 지원자들인 인민대학습당 연구사 '최성실' 등에게 감사 전달(6.12,중방)
- 6/14, 김정은 黨 제1비서, 6.13 창성군 여러 부문 사업(창성식료공장·창성각·창성국수집·은덕원·창성혁명사적관 등) 현지지도(6.14,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최취·박태성·리만건(평안북도黨 책임비서) 동행 및 김철웅(창성군黨 책임비서) 등 현지 영접
- 6/15, 김정은 黨 제1비서,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6.15,중통·중·평방)
 - 최룡해, 최취, 박태성, 홍영철, 리만건(평안북도위 책임비서) 등 동행
- 6/16, 김정은 黨 제1비서, 유평혁명사적지 현지지도(6.16,중통·중방)
 - 최룡해, 최취, 박태성, 홍영철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세포등판 개간 전투장 현지 요해 (6.10, 중통 · 중방)
- 대성산종합병원에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친필현판' 설치 준공식, 6.10 최룡해(軍총정치국장) · 전창복(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참가 下 진행(6.10, 중통 · 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6.12), '금수산태양궁전 꾸리기 사업에 기여한 5,544 명의 군인·일꾼·근로자·청년학생들'에게 '김일성 훈장' 등 표창(6.12, 중통)
- '김정은 호소문(6.4,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과업관철' 위한 세포등판 (※강원도) 군인건설자 · 돌격대원들의 군민(※軍民)대회, 6.13 현지 진행(6.13, 중방 · 평방)
 - 박봉주(내각 총리) · 장정남(인민무력부장) · 김기남 · 곽범기(黨 비서) · 리병삼(인민내무군 정치국장) · 로두철 · 리무영 · 리철만(내각 부총리) · 리용수(黨 부장) 등 참석
- 박봉주 내각 총리, 양각도축구경기장과 평양기초식품공장 현지 요해(6.13, 중통)

나. 경제

● 금강산특구 대규모 개발 곧 시행(6/11, 연합뉴스; 금수강산)

-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의 오충혁 사장이 북한의 대외 홍보잡지 '금수강산' 6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금강산특구의 개발 계획에 대해 "금강산관광특구지역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 관광 대상들을 건설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입수보도함.
- 오 사장은 "이제 가까운 앞날에 특구 전체 영역에 대한 개발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국제관광특구로서의 면모가 훌륭히 갖추어지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또 외국의 법인 및 개인은 물론 남측과 해외동포가 금강산특구의 투자개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강조함.

● 北 "도로 설비·자재 국제경쟁 입찰로 조달"(6/11, 연합뉴스; 내나라)

-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는 지난달 29일 게재한 경제 관련 소식에서 평양과 평안남도 평성 사이에 새 도로가 건설된다고 하며 "이와 관련해 국토환경보호성은 새 도로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등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내나라는 국토환경보호성이 조달할 유압굴착기, 버스, 시멘트, 변압기 등 50여 종의 설비와 자재를 열거하고 올해 7월 초 입찰초청장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도로 건설의 기술지도와 관련한 국제자문 봉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박봉주(내각총리), 6.11 함경남도 '덕성광산과 금야청년탄광' 현지
요해(6.11,중통·중방)

다. 군사

- 北, 軍부총참모장에 주동철 임명(6/13, 연합뉴스)
 - 북한군 장성 주동철이 군 부총참모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
뉴스가 13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대규모 축산기지가 건설되는 강원도 세포
등판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호소문을 관철하기 위한 군민
대회가 열렸다고 토론회 가운데 주동철을 부총참모장으로 소개했다며
이같이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병 없어"(6/11,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은 지난달 22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낸 보고서에서 "
새로운 AI 발병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北 집단체조 '아리랑' 내달 22일 시작(6/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매스게임)인 아리랑 공연이 오는 7월 22일부터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중앙통신은 아리랑 공연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담게 된다고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며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
석 의지와 전투적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2. 대외관계

가. 일반

- 中지린성, 투먼 北전용공단 대기업 입주 추진(6/11, 자유아시아방송
(RFA))
 - 중국 지린(吉林)성이 북한과 접경한 투먼(圖們)시에 조성한 '조선(북한)
공업원구'에 중국의 유명 대기업 입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
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지린성 경제기술합작국은 국제합작시범구 중점사업을 공개하면서 조선 공업연구를 첨단 정보통신(IT), 전자, 애니메이션 산업단지로 중점 개발하고 이곳에 중국의 유명 가전업체인 칸지아 그룹과 하이얼 그룹의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미국 상원 '5년간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안 통과(6/11,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Farm Bill)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이 처리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오는 2018년까지 5년 한시법인 이 법이 다시 개정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지가 법제화됨.
 - 이 법안 제3015조(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는 국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상·하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웨이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北, 재미 한인에 이산가족 상봉 허용(6/12, 미국의 소리(VOA))**
 - 미국 서부의 한인 실향민 단체인 '북가주이북5도민연합회' 백형기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고 12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함.
- **김정은, 스위스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것 같다(6/12, 연합뉴스)**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 스위스 대표인 우르스 게르브르 육군 소장은 12일 "김정은이 내가 사는 도시(베른)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게르브르 소장은 정전협정 60주년을 앞두고 이날 판문점 중감위 회담장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업을 잘못 들었다는 것은 농구만 하고 수업은 제대로 안 들었다는 뜻"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스위스에서 몇 년간 머문 경험이 앞으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힘.
- **일본 방위상 "남북 대화 계속하길"(6/12, 교도통신)**
 - 오노테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도야마(富山)현에서 취재진에게 "(남북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대화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12일 교도통신이 보도함.



- 유럽 기업인들 '투자처 물색' 위해 9월 방북(6/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대북투자 자문 전문업체인 네덜란드의 'GPI컨설팅사'의 폴 치아 대표가 유럽의 기업인들이 북한 내 투자처를 물색해보기 위해 오는 9월 방북한다면 방북단은 9월 23~28일 북한의 산업 현장을 둘러본 뒤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 사업의 장단점과 실무절차를 주제로 학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北, 러 아무르주와 경제협력 확대 협정 체결(6/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7일 올렉 코제마코 아무르 주지사와 림청일 신임 나훗가 주재 북한 총영사가 아무르 주정부 청사에서 무역, 임업, 농업, 건설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인터넷 판매(6/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가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공식 해외 웹사이트(www.mansudaeartstudio.com)'를 통해 외국에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러시아-북한 철도 통합배차센터 설치키로(6/14, 연합뉴스)
 - 러시아 철도공사 공보실이 13일(현지시간) 언론보도문을 통해 자국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북한 구간 한반도중단철도(TKR)의 열차 운행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통합 배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양측의 합의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전길수 북한 철도상과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과와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고 공보실은 설명했다. 양측은 또 열차 운행 지침과 운행 일정도 함께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본 유족 10여명, 15일 가족 묘 성묘차 방북(6/14, 산케이신문)
 - 북한에 가족의 유골이 있는 일본인들이 15일 성묘차 방북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14일 보도함.
 - 구마모토(熊本)·가고시마(鹿児島)현에 사는 일본인 유족 10여명은 14일 베이징을 거쳐 15~25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 주중 北대사관, 김정일 방중 30주년 연회 개최(6/14, 조선중앙통신)
 -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은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방중 30주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김 위원장은 후계자 시절이던 1983년 6월 1~13일 중국을 처음 방문해 후야오방(胡耀邦) 당시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를 만날.
 - 연회에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와 중국의 리위안차오(李源朝) 국가부주



석, 류제이(劉結一)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리우젠민 외교부 부부장 등이 참석함.

- **北 김정은 "북중친선 발전에 확고한 의지"(6/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5일 60회 생일을 맞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형제적 중국 인민이 중국 공산당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힘.
 - 이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견지에서 대를 이어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함.
- **중국, 훈춘에 출입국사무소 설립...북한관광 확대(6/15, 신문화보(新文化報))**
 - 중국 당국이 자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북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지린성의 유력 일간지인 신문화보(新文化報)가 16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 8일 훈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설립을 위한 현장 점검을 했으며 공안부가 이르면 1~2개월 안에 사무소 설립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함.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은 '6.25전쟁 도발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책임 전가 및 韓美의 매해 '한국전 기념'은 '국제무대에서 北을 전쟁을 도발한 범인으로 몰아보려는데 있다'고 왜곡 주장(6.10, 중통·노동신문)
- [중통 논평]日 방위상의 對北발언(북조선의 핵 및 미사일개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관련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군사대국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며 '군국화책동을 합리화해 보려는 술책'이라고 비난(6.11, 중통)
- 김정일의 첫 방중('83.6.1~13) 30돌 관련 '세대를 이어 북-중 친선 불변 등 업적 칭송 및 兩國 친선유대 강화발전 노력' 지속 강조(6.13, 중통·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최룡해, 시진핑에 '北 핵보유국' 인정 요구(6/16,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



합뉴스가 16일 전함.

- 한·중 군사외교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소식통은 16일 "지난달 방중한 최룡해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 측은 북한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힘.

● **北, 美에 고위급회담 제안...비핵화 의지 피력(종합2보)(6/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회에서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국방위 대변인이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조(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북한도 남북 실무접촉 결과 신속 보도(6/10,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 발표문이 발표된 직후인 10일 오전 3시50분께 '북남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진행'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 개최' 등 주요 합의 내용을 즉각 전했다며, 조선중앙방송도 오전 6시께 '북남당국회담 실무접촉 발표문' 전문을 공개함.
- 북한 매체들은 회담 의제 및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 남북 간 이견이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발표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실무접촉 발표문'이라며 북측 발표문만 보도함.
- 북측 발표문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외에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명시함.

● **수석대표 '격' 대립...남북당국회담 무산(6/11, 연합뉴스)**

- 남북 양측이 11일 당국회담 수석대표 '격(格)'을 놓고 대립하던 끝에 타협에 실패,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회담이 무산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



로 통보해 왔다"고 회답 무산 사실을 발표함.

- 우리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명씩으로 구성된 대표단 명단을 이날 교환했으며, 남측은 대표단에 천해성 통일정책실장,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이수영 교류협력국장 등을,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국장, 김성혜 조평통 부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권영훈 등을 대표단에,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보장성원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짐.

● **北 "남북대화 분위기 위해 6·15행사 열어야"(6/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북한이 제의한 6·15공동선언 행사와 7·4 공동성명 기념 문제가 잘 풀린다면 남북대화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12일 '대화 분위기 조성은 중요한 현실적 문제'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우리의 주동적 대화제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그를 위한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조평통 "당국회담 무산 南 책임...회담에 미련 없어"(6/13,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당국 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책동으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며 "우리는 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남측이 처음부터 장관급회담을 주장하고 실지로 통일부 장관을 내보낼 의향이냐고 몇번이고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 수석대표를 아래급으로 바꾸어 내놓는 놀음을 벌린 것은 북남 대화역사에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해괴한 망동으로서 무례무도의 극치"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통일전선부장이 회담대표단 단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무식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남 대화 역사가 수십년을 헤아리지만 지금까지 우리측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공식 당국대화 마당에 단장으로 나간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조함.

●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 불통 장기화(종합)(6/14, 연합뉴스)**

- 통일부가 우리측 판문점 연락관이 14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께 북측 연락관에게 시험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에서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측은 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12~13일에도 시험통화에 응하지 않아 사흘째 불통 상태가 계속됨.



- 北, 6·15 맞아 "북남관계 개선은 중대과업" 강조(6/15, 노동신문)
 - 북한은 1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맞아 공동선언의 의미를 부각하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
 - 신문은 15일 '6·15의 기치 높이 자주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6·15선언이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했다고 평가함.
 - 이어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앞에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대원수님들의 간곡한 유훈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6·15공동행사 무산 비난..."반통일 범죄"(6/15, 연합뉴스)
 - 북한이 15일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파탄 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6·15민족공동행사 무산을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자 용납 못 할 도전"이라며 "괴뢰패당의 반통일적 범죄를 해내외 전체 동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가 '남남갈등'을 우려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의 방북을 불허한 데 대해 "북남관계가 격폐돼 서로 만나지 못해야 갈등도 없어지고 통일문제도 논하지 말아야 저들도 편안하다는 극악무도한 분열의 논리"라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남북 실무접촉(6.9, 판문점 평화의 집) 관련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 및 '발표문 채택' 보도(6.10, 중통·중방)
- 北, '민간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내왕과 교류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여러 난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남당국은 해내외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꺼릴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주장(6.11, 중통·노동신문)
- [중통 논평]'남북 당국회담' 무산책임을 "애초부터 이번 회담을 불순한 기도에 이용하려고 작정한 남조선 당국"이라고 역측 주장 및 우리 당국의 회담 입장(남북 수석대표 同級 요구 등) 왜곡 비난(6.13, 중통)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총대변인 성명(6.15)】'6.15민족공동행사가 남 당국의 방해책동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며 '이것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며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주장(6.15, 중통·중방)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 6자대표 "북한, 외교-대화 의지 부족">(6/15,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4일(현지시간) 최근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대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부적절하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했음.
-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와 미국 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WWICS)가 워싱턴DC에서 공동 주최한 '워싱턴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의 수석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를 놓고 벌어진 결과를 보고 실망했다"면서 "이는 결국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나서겠다는 근본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 그는 특히 "북측의 이런 '게임즈맨십(gamesmanship·게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시도)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음.
- 데이비스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남북당국대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와 박 대통령의 원칙적인 접근에 찬사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국의 외교관과 정부당국자들과 접촉하면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데이비스 대표는 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전에 대해 원칙적인 접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음.
- 그는 특히 "북한이 악행을 중단하거나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한다면 북한의 강탈적인 습관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또 "남북관계와 (북한 내) 인권문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없다면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웃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불변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데이비스 대표는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인 북한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원한다"면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지하고 의미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음.
- 그는 "우리는 작년 '2·29 합의' 파기 이후에도 뉴욕채널을 유지하는 등 북한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북한과의 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이전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된 건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신선한 이미지와 북한 주민의 나은 삶을 강조한 초기 발언이 있었지만 그의 변화는 환상이었다"면서 "그는 과거의 북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음.
- 이밖에 그는 "북한 문제는 북미 양자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이 긴밀하고 강화된 협력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른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강조했다.

● <최룡해, 시진핑에 '北 핵보유국' 인정 요구>(6/16,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직접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 군사외교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소식통은 16일 "지난달 방중한 최룡해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 측은 북한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혔음.
- 소식통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1·5 트랙' 성격의 민·군 대표단이 중국군의 권위 있는 인사에게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전했다.
- 북한은 자신들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정당화하고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 특히, 최룡해가 김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만큼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는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이런 점에서 최룡해가 전달한 김 제1위원장의 친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은 지난해 4월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했으며 올해는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하는 등 핵 보유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보유를 전제로한 군축 대화를 미국 등에 요구하는 상태임.
- 시 주석이 지난 7~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것도 최룡해의 방중 메시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앞서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도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한 정승조 합참의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장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오는 27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 한중 양국은 현재 비핵화 원칙을 비중있게 명기하는 방향으로 공동성명 문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했다는 소식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도 "중국이 한반도 안정과 함께 비핵화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는 사실상 도발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장비와 인력의 움직임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는 상황임.
- 군의 한 관계자는 "핵실험을 했던 강도를 보수하는 작업이거나 기존에 뚫어놓은 강도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일 수도 있다"면서 "군은 풍계리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 미·북 관계

● <미국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별개 사안">(6/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성사됐지만 북미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음.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는 (남북대화와는) 약간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오랜기간 밝혀왔다"며 "다만 이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기 위한 확실한 행동에 나설 의지가 있을 때 그렇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룰 수 있고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신뢰할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사키 대변인은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해 "남북이 개성공단 문제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한 대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늘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해 왔고, 역내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면밀하게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 당국간 대화가 전격적으로 성사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미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 이에 따라 지난해 '2·29 합의' 파기 이후 중단된 북미 간 공식대화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향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공화의원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6/13,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확인됐음.
- 미국 하원에 따르면 일리애나 로스-레티넨(플로리다) 등 12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케리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 치하에서도 북한 정권은 그의 부친이나 조부 때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서 "북한을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천안함 사태를 비롯해 연평도 포격,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이란 및 시리아와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협력 등을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이유로 들었음.

- 이들은 "북한은 이란이나 시리아와 같은 테러지원국 정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헤즈볼라 등 테러조직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러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실수로, 재지정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한에는 하원 외교위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장인 로스-레티넨 의원을 비롯해 테드 포(텍사스) 테라비확산 소위원장, 스티브 쉘벳(오하이오)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이 서명했음.
-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말 의회에 제출한 '2012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시리아, 쿠바, 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으며, 북한은 5년 연속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음.

● <미국 "대북 식량지원 금지법" 주민 표적 아니다>(6/13,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최근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Farm Bill)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또 북한 주민에게 적절한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 쟁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년간 대북 식량(영양) 지원을 금지한 미국 상원의 농업법 조항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원조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음.
- 사키 대변인은 "상원에서 그런 법이 통과된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잘 알다시피 그건 북한의 주민을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미국)는 북한 주민이 필요한 원조와 구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 이어 "여러 비정부기구(NGO)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북한에 적절한 (원조) 자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사키 대변인은 "(상원의 대북 지원 금지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 상원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미국의 대외 원조용 기금을 북한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을 가결처리했음.
- 5년 한시법인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의 국익과 연관돼 대통령이 예외(웨이버)를 적용할 상황이 아니라면 2018년까지 대북 지원이 금지됨.

● <미 국방장관 "북한 위험한 나라...도발 대비해야">(6/13, 미국의소리)

- 북한은 여전히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한 나라라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 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헤이글 장관은 또 11일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중국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과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다른 현안과 의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야들도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라는 것임.
- 헤이글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미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과 북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헤이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남북 당국간 대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 같은 대화는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위험한 나라라고, 헤이글 장관은 강조했다.
- 북한이 예측불가능하고 도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무장지대 남쪽에 동맹국인 한국이 있으며, 미사일 능력 등 무기 능력을 갖췄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위험한 나라라는 것임.
- 헤이글 장관은 지난 석 달 동안 미국이 괌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바로 그 같은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 헤이글 장관과 함께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마틴 템프시 미 합참의장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4가지를 제시했음.
- 먼저 북한이 미국 본토나 태평양 지역의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토안보 측면을 꼽았음.
- 템프시 의장은 이밖에 한국전쟁 정전협정 준수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 차단, 그리고 동맹국 보호를 이유로 들었음.
-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헤이글 장관은 민주당 소속의 메리 랜드리 상원 의원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문제를 제기했음.
- 랜드리 의원은 북한 강제수용소에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인권문제라고 말했다.

○ <북한, 미국에 전격 대화제의...그 의도는>(6/16, 연합뉴스)

-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5일 만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해 그 의도가 주목됨.
- 북한의 이번 제의는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중대담화 형식으로 나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지가 담겼음을 분명히 했음.
- 또 북미대화를 제의하면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건설 문제 등 한반도에서 북미간 현안을 의제로 제시하고 포괄적 논의가 가능한 '고위급 회담' 형식을 제의했음.
- 과거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과 조명록 당시 국방



- 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수교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재연해 보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임.
- 이번에 제의한 북미대화의 의제와 급으로 미뤄 북한은 한반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임.
 - 여기에다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핵 무력과 경제 발전 병진 노선을 명확히한 북한이 비핵화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명시한 점도 눈에 띈.
 -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온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자, 북한이 비핵화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으로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임.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담회에서 세계적 차원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와 핵위협 해소를 주장한 것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음.
 - 북한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해 노벨평화상을 받는 요인이 되는 '핵 없는 세계 건설'까지 언급한 것도 주목됨.
 - 북한의 이번 제안은 물론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관련국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밝힌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회담 제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북중간에 조율된 입장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음.
 -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논리를 북한이 수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함.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집중 논의된 만큼 이번 회담 제의가 중국 측 입장을 전달받고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도 속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음.
 - 여기에다 이번 북한의 전격적인 북미 고위급회담 제의는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북미회담 제의에 앞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특별담화문으로 남측에 당국회담을 제의하고 실무접촉까지 가졌지만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대립하다 회담이 열리지 못했음.
 - 따라서 미국과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우리 정부가 회담에 나서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있음. 하지만 북한의 제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지난해 2월 북미간 제3차 고위급 회담 합의사항인 '2·29합의'가 같은 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이행이 무산된 후 미국 정부의 대북 불신이 여전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임.
 -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5일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인 북한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원한다"면서 "진정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지하고 의미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회담 제의는 미국의 거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보여주기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에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관련국들이 거부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의 이해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임.

다. 중·북 관계

● <“中, 북한정책 전통주의-수정주의 논쟁 치열”>(6/11,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북한정책과 관련해 전통주의자와 수정주의자 간의 논쟁이 치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한반도 전문가인 진찬룡(金燦榮)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는 11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와 화정평화재단 공동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의 진화'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소개했음.
- 진 교수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4년과 그것이 악화한 2002년 사이에 중국은 방관하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심스러운 정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 미국이 냉전 정책을 고집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핵개발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당시 중국의 시각이었다고 진 교수는 설명했다.
- 그러나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중국은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 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수용하면서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제시했고 6자회담 참여국 사이에 중재 역할도 맡았음.
-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중국은 비핵화 달성보다는 한반도 안정 유지를 우위에 두고 북한에 대해 다시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 진 교수는 "그 결과 중국의 전략과 목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됐다"며 "중국의 입장이 서둘렀다는 것은 올해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다시금 명백해졌다"고 평가했음.
- 현재 중국 내에선 북한 정책에 관한 전통주의자와 수정주의자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 교수는 소개했음.
- 전통주의자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수정주의자들은 북한에 얽매어 중국의 대외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임.



- 진 교수는 "올해 5월8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06년 이후 들어 보지 못했던 '북중은 보통의 관계라는 어구를 언급한 것을 보면 수정주의자들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음.

라. 일·북 관계

- <“日, G8정상회의 선언문에 북한 문제 포함 추진”>(6/11, 연합뉴스)
 - 일본이 다음 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1일 일본 NHK 방송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등 북한 관련 문제들을 G8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은 특히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적 이슈와 함께 1970년대에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모두 17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13명의 납치 사실만을 인정한바 있음.
 - 피랍자 가운데 5명은 2002년과 2004년 일본으로 돌아왔음. 북한은 나머지 8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 같은 주장을 믿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일본 정계에선 최근 피랍자 문제를 국제 문제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음. G8 정상회의는 다음주 17일부터 이틀 동안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열림.
- <일본 유족 10여명, 15일 가족 묘 성묘차 방북>(6/14, 연합뉴스)
 - 북한에 가족의 유골이 있는 일본인들이 15일 성묘차 방북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음.
 - 구마모토(熊本)·가고시마(鹿兒島)현에 사는 일본인 유족 10여 명은 14일 베이징을 거쳐 15~25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
 - 방북 기간에 청진과 흥남의 일본인 매장지를 방문함. 지원 단체인 '북한 지역에 남은 일본인 유골의 수용과 성묘를 요구하는 유족 연합회' 관계자와 일본 취재진이 함께 방북함.
 - 북한이 이른바 '유골 문제'로 일본인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번이 5번째임.
 - 애초 4월5일 방북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둘러싸고 긴장 국면이 조성된 탓에 두 차례 연기됐음.
 - 종전 후 함흥 부근의 일본인 수용소에서 남동생과 여동생을 잃은 가고시마현 기리시마(霧島)시의 다니구치 마키코는 14일 출발 전 하네다공항에서 "가족들 모두 이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묘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북한 지역에서 숨진 일본인은 약 3만4천600명으로, 유골 약 2만1천600주(柱)가 북측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전몰자의 유골을 수집해 일본으로 옮겼지만, 국교가 없는 북측의 유골은 방치해 왔음.
- 북측은 일본인 납치 문제로 얼어붙은 북·일 관계를 타개할 의도로 지난해 봄 일본인 유족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음.

마. 러·북 관계

- <“北, 러 아무르주와 경제협력 확대 협정 체결”>(RFA)<(6/13, 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초 러시아 극동지방의 아무르 주(州)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음.
 - 지난 7일 올렉 코제마코 아무르 주지사와 림청일 신임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가 아무르 주정부 청사에서 무역, 임업, 농업, 건설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RFA가 전했다.
 - 앞서 북한 무역성과 아무르 주는 지난 2011년 10월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올봄부터 북한은 아무르 주의 토지 1천ha를 확보해 농사를 짓고 있음.
 - 아무르 주 코제마코 주지사는 협정 체결식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이 강화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파견되는 일부 북한 노동자들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 림청일 총영사는 북한 외무성 제3 아주국장 자격에서 지난해 8월 외교단사업총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아무르 주를 방문해 북한 노동자의 추가 파견 및 문화원 개설 문제 등을 협의했던 인물로, 심국룡 전 총영사의 후임으로 언제 부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바. 기 타

- <성김 “한국-중국 좋은 관계 유지, 미국에도 좋은 일”>(6/13, 연합뉴스)
 - 성김 주한미국대사는 “한국과 중국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음.
 - 성김 대사는 지난 11일 유튜브에 올린 ‘대사님 질문 있어요(Ask the Ambassador)’ 동영상에서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을 미국이 걱정하는지 궁금해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저는 중국이 다른 이웃국가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김 대사는 남북대화 국면이 시작되기 전 촬영된 이 동영상에서 “북한은 협상 석상에 나와 우리와 타협하고 믿을만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협상을 통한 진전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벅락 오바마 대통령, 워싱턴의 고위 정부 관료들이 분명히 밝혔듯이 (북한 문제에서) 진지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우리는 모두 북한이 야기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원한다"고 밝혔음.
- 그는 "하지만 외교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상대방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軍, 이지스함 탑재용 SM-6 미사일 도입키로>(6/12, 연합뉴스)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계획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함대공미사일이 도입됨.
- 또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는 최적의 KAMD 구축을 위한 한미 간의 공동 연구가 시작됐음.
- 정부 고위 소식통은 12일 "국방부와 합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KAMD 종합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SM-6급 함대공미사일을 도입해 해상요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음.
- 군은 오는 2016년께 SM-6 미사일을 도입해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에 장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SM-2 블록4의 개량형인 SM-6 미사일은 사거리가 320~400km에 달해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임.
- 현재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SM-2 미사일은 사거리가 148km에 불과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제약이 있음.
- 군 일각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지 않아 우리 이지스함이 '눈(레이더)'만 있고 '주먹(타격수단)'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음.
- 미국의 이지스함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탑재해 강한 역지력을 갖추고 있음.
- 군이 SM-6 미사일 도입과 함께 추진 중인 KAMD 구축 계획에는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와 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및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개발도 포함됐음.
-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 수백 발을 2016년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 수백 발도 추가 구매해 내년부터 배치키로 했음.
- M-SAM과 L-SAM은 각각 2020년 2022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 L-SAM은 고도 60km 이상을 비행하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



이는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PAC-2 미사일과 성능이 개량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 사거리의 4배에 이릅니다.

- 군은 최적의 KAMD 구축을 위해 미국과 '실무그룹회의'를 구성해 연구에 착수했음.
- 정부 소식통은 "미측과 KAMD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할 것"이라며 "연구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우리 군이 미측과 KAMD 공동연구를 하고 다국적 탄도탄 방어 전투실험(님블 타이탄)과 한·미·일 연합 탄도탄 탐지·추적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어 MD 참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軍, 탄도탄방어 국제훈련 지속 참여...'MD 논란'(6/12, 연합뉴스)>

-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국제훈련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사실이 밝혀져 MD(미사일방어) 참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MD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
- 하지만 한·미·일 탄도탄 탐지·추적 연합훈련과 다국적 탄도탄 방어 훈련에 지속 참가하고 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한미간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음.
- 군이 참가하는 다국적 탄도탄 방어훈련으로는 '님블 타이탄(Nimble Titan)'이 대표적.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개하면서 우리 군의 참여 사실이 처음 드러났음.
- 미국이 2008년부터 주관한 님블 타이탄은 2년 주기로 실시. 훈련은 2020년에 가상의 적국이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 이에 대처하는 워게임과 토의 방식으로 진행됨.
- 지역미사일 방어 작전상황을 그래픽으로 묘사해 지휘관이 의사결정과 미사일 방어체계 성능 평가 등에 활용한다고 함.
-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9개국이 참가하고 있음. 벨기에, 캐나다,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은 참관국
- 국방부는 12일 "님블 타이탄은 유럽과 아태지역 2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다국적 탄도탄 방어 전투실험"이라며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읍서버 국가였고 작년부터는 참가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 또 한·미·일 연합 탄도탄 탐지·추적훈련도 4년째 실시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됐음.
- 작년 6월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이 훈련에 참여했음. 지난달에는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 동남쪽(일본 규슈 서쪽) 공해상에서 3국 훈련이 진행됐음.
- 그간 해군과 국방부는 이 훈련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가상으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그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이 훈련을 자칫 미·일 공동의 MD와 연결하는 시각을 경계했기



때문으로 보임.

- 국방부는 이 훈련에 대해 "우리 해군의 이지스 전투체계 성능 확인과 승조원의 운용 능력 배양 등을 위해 우리 해군이 미·일과 2010년부터 실시하는 정보공유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 군은 이들 훈련 참여가 MD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군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에 참가했을 뿐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히 효율적인 KAMD 구축과 운용을 위해 미국과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미 워싱턴서 고위급 '한반도 현안' 협의>(6/12, 연합뉴스) 불

- 미국을 방문중인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11일(현지시간)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내정자 등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최근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음.
- 한미 양국은 특히 남북한이 참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남북당국간 회담의 경과와 북한의 최근 동향 및 대화공세의 의도 등을 분석했음.
- 또 미국측은 지난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에 배석한 러셀 내정자는 이번 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한반도 비핵화 추구하고 북한 '핵무기 불용'의 의미와 향후 미중 양국의 북핵 조율 방안 등에 대해 주로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 북한에 상당한 충격일 것"이라면서 "최근의 대화공세도 북한의 수세적 국면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북한이 언제까지 이런 행보를 할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한미 양국은 본격적인 대화를 진행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 김 차관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인사,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등 학계인사들과도 면담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미국 "한반도 위기대응 예산은 시퀘스터 예외">(6/13,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예산은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 '시퀘스터(sequester)'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카터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신국가안보센터(CNAS) 주최 연차총회에서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에만 국방예산 37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면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국방지출 삭감의 예외 항목과 관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은 절



- 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병에 대한 보수도 시퀘스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특히 "군(軍)의 다른 핵심적인 기능도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핵 억지력과 함께 이른바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로 불리는 한반도 위기 대응 능력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국방부는 시퀘스터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국가방어와 미군지위 유지라는 2가지 핵심 목표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카터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 전략을 설명하면서 "수십 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번영과 정치발전을 이뤘다"며 한국과 일본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 그는 "앞으로도 이런 번영이 계속되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성취한 것이고, 이는 역내에서 미국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이밖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징병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군에 입대할 필요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質)"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한편, 이날 연차총회에서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국장 등은 '아시아 재균형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최근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 베이더 전 보좌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계획, 중국 금융기관의 대북 금융거래 중단, 중국 전문가들의 북한 비판 논평 등을 언급한 뒤 "중국 은 29세의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에 대해 떠드는 것에 대해 불쾌할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시소를 탔던 중국이지만 최근 몇 개월간 상황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빅터 차 전 국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마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진정성이 없고, 전술적인 협력만 했던 중국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또 최근 과거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간 갈등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화할수록 이 문제에 대한 회피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점점 더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한·중 관계

○ <朴대통령 남북관계 교착속 방중채비 박차>(6/1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주말인 전날에 이어 휴일인 이날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중국 방문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라고 함.
- 박 대통령은 이달 초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중국에서 장예쑤이(張業蓊) 외교부 상무(수석)부부장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가진 고위급 전략대화 등 양국간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한 회담 의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2차례 정도 청와대에 들어와 박 대통령에게 방중 관련 시안을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북한 관련 이슈들임.
- 현실적으로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등 북한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 더구나 남북당국회담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재차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이슈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각별한 공을 들일 수 밖에 없음.
- 박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가진 만큼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시 주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양국간 협력 약속을 끌어냄으로써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 박 대통령이 중국 외교가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탕 전 국무위원과의 접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 뒤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나, 남북회담 무산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북한을 설득해달라"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도 정상회담을 앞둔 '포석'으로 해석됐음.
-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탕 전 국무위원은 비록 전직이기는 하지만 시 주석에게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와 2천151억 달러 규모의 교역량을 기록한 최대 교역국임.
- 이런 만큼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하는 경제 사절단은 역대 최대 규모일뿐만 아니라 기업인 개개인의 면면도 어느 때보다 화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음.
- 특히, 회담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양국은 FTA와 관련해 방향과 범위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며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이 이견을 좁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음.
-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한중 FTA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 확대 방안,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과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다. 한·일 관계

● <한일수교협상 일본 대표 "이승만 정권 타도해야" 망언>(6/13, 연합뉴스)

- 195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의 일본 측 수석대표였던 구보타 간이치로 당시 외무성 참여가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이승만 정권 타도'를 거론했음을 보여주는 일본측 비밀 공문서가 13일 공개됐음.
- 일본 시민단체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은 지난 3~4월 외무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문서 사본을 확보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 구보타는 1953년 10월 26일자로 작성한 '일한회담 결렬 선후대책'이란 제목의 20쪽 분량의 문서에서 "한국 측은 '식민지 지배는 한국에 해만 끼쳤고, 억압받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가장 중요한 새 국제법 원칙이기에 일본 측은 한반도의 모든 재산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적었음.
- 이어 그는 한국인이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횡포를 부린다"고 평하면서 당시의 이승만 정권에 대해 "타도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여기에 더해 한국 측이 "잘난 척하는 구름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국교정상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언급했음.
- 구보타가 자신의 식민지 정당화 발언 때문에 한일회담이 결렬된지 5일 후 작성한 이 문서에는 본인 서명과 함께 '극비'라는 글자가 적혀 있음. 이번에 시민단체 측에 공개되기 앞서 비밀지정이 풀렸음.
- 구보타는 이 문서를 작성하기 직전 열린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조선통치는 나쁜 면 뿐 아니라 좋은 면도 있었다"고 발언, 1951년 시작된 국교정상화 회담이 4년여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음.
- 결국 일본이 회담대표를 교체하고, 발언을 철회한 후인 1958년 회담이 재개돼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됐음.
- 아사히에 따르면 니가타(新潟) 국제정보대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구보타 발언의 사상적 기초는 변하지 않았다"며 "근년 들어서도 일본 정치가들은 같은 발언을 하며 그때마다 안팎에서 비난받는다"고 지적했다.
- 요시자와 교수는 이어 "일본 정부는 한일 기본조약과 함께 맺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위안부' 문제 등은 해결됐다고 하지만 어떤 사상에 근거해 무엇을 해결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금 제기된다"고 부연했음.

라. 미·중 관계

● <미중 정상회담 결과, 4주후 전략경제대화서 판가름>(6/10, 월스트리트저널)

- 4주 뒤 있을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립된 양국의 상호 이해와 양국 지도자의 개인적 친밀함을 시험하는 첫 번째



장이 될 것임.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격식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음.
- 양국 관계자들은 8일(토)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마무리된 정상회담이 향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의제에서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으며 두 국가의 의견차이에 대해 더 자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과 비슷하게 편안한 분위기로 중국에서도 회담을 갖기로 했음.
- 그러나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 북핵 프로그램, 아시아 내 중국의 해양분쟁 등 미중 관계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
- 정상회담은 8시간 회담, 저녁 만찬, 리조트 내에서 두 정장과 통역사만 참여한 50분 간 산책으로 이루어졌음.
- 지난 9일(일) 중국 전문가들과 국영 매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 취임한 뒤 오바마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난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시진핑 외교정책의 승리라고 평했음.
- 이는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를 형성하자는 제안임.
- 미국 및 해외의 전문가들은 좀 더 회의적인 반응임.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시도는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회담에서 그 결과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조심스러움을 내비쳤음.
- 7월8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될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최초로 사이버보안이 의제에 포함됐음.
- 국제위기그룹의 스테파니 T. 클라인-알브란트 동북아시아 사업국장은 "광범위한 발언과 희망적인 어조가 가득했지만 항상 문제는 세부사항에 있다"며 "전략경제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 달 있을 전략경제대화는 두 국가 간 불편하고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는 사이버보안 문제를 위한 워킹그룹을 포함하고 있음.
- 두 정상은 사이버보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거나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진 않았으나 사이버 워킹그룹에게 지침을 제공했다고 톰 도널론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밝혔다. 이 워킹그룹은 다음 달 토의 결과를 두 정상에게 보고할 예정임.

● <시진핑, 오바마에 "다오위다오는 중국 핵심이익">(6/12,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8일 미국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때 센카쿠(중국어명: 다오위다오) 열도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매체들이 12일 보도했음.
- 미·중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7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



- 상회담 만찬 때 "다오위다오는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의 영토 주권이 걸린 핵심적 이익"이라고 말했다고 함.
- 시 주석은 여기에 더해 "중·미 양국은 서로 상대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중국 정부가 말하는 '핵심이익'은 외국에 타협이나 양보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국익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영토 문제와 관련해 사용돼왔음. 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구, 대만 문제 등에 '핵심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이익'을 거론한 것은 센카쿠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을 미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대일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센카쿠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양보를 유도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분석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센카쿠 영유권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기초를 밝히고, 대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시 주석의 '핵심이익' 관련 발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마. 미·일 관계

- <미국 뉴저지주 상원, 20일 위안부 결의안 표결>(6/15, 연합뉴스)
 - 미국 뉴저지주 상원이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함.
 - 15일(현지시간) 한인 권리 신장 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단체에 따르면 뉴저지주 상원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임.
 - 이번 결의안은 로레타 와인버그(민주당)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것으로 지난 3일 주상원 보건·인권·노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됐음.
 - 와인버그 의원은 한인 사회에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결의안 채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음.
 - 이에 앞서 뉴저지주 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20만 명의 고통과 희생을 기린다는 내용의 결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뉴저지주 상원이 본회의에서 표결할 결의안은 하원에서 채택된 결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뉴저지 하원은 결의에서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는 1932~1945년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성 노예(sexual slavery)'를 일컫는 일본 정부의 표현"이라고 전제하면서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인을 받아내려고 싸우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범죄를 미래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美 '개인정보 수집' 폭로자 망명 수용 가능">(6/13, 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망명을 신청한다면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1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음.
 - 스노든은 최근 영국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망명하고 싶다"면서 아이슬란드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음.
 - 그러나 크리스틴 아르나도티르 중국 주재 아이슬란드 대사는 "아이슬란드 법에 따르면 일단 당사자가 아이슬란드에 있어야 망명 신청서를 낼 수 있다"면서 현재 홍콩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스노든의 망명에 대해 조건부 거부 방침을 밝혔음.
 -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법무부에 스노든의 행위가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범죄 수사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수사에 착수했음. 미국은 홍콩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스노든의 본국 송환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난 2010년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 25만여 건을 공개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스노든을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내부고발자인 그에게 각국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사. 중·일 관계

- <중국, 주변국 합동 군사훈련에 긴장>(6/10, 연합뉴스)
 - 일본,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이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한 합동 군사훈련을 연이어 벌이자 중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10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섬탈환 작전에 주안점을 둔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 이번 마일 합동 섬탈환 훈련은 센카쿠(다오위다오) 사태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 중국은 이번 합동훈련에 일본의 헬리콥터 항모가 참여하는 등 일본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일본의 성공적 및 상륙 역량이 향상되면서 중국에 적지않은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아울러 센카쿠 문제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이 일본과 합동훈련을 함으로써 개입의 폭을 넓히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중국 측은 판단하고 있음.
 - 중국은 이에 따라 센카쿠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긴장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응방안 검토에 나섰다.
 -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합동군사 훈련에 대응해 자체 상륙훈련과 섬 공격 훈련 등을 벌이고 서태평양 원양 훈련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와 베트남이 지난 8일부터 실시한 남중국해 합동훈련도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음.



- 중국은 여러 차례 인도에 남중국해 개입 중단을 촉구했으나 인도는 이런 중국의 요청을 끝내 거부하고 베트남과의 합동훈련을 시행했기 때문임.
- 중국은 인도가 남중국해 진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베트남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인도는 현재 베트남과 공동으로 남중국해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를 하고 있으며 2년 전에는 인도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하다 중국 해군의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남중국해 진출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인도의 이번 합동 군사훈련이 남중국해 진출에 대한 중국의 대응수위를 관측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인도가 계속 동남아시아를 향해 '동진'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에 시달리는 필리핀은 수시로 미국과 군사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점을 중국에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은 일본이 베트남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주변국 사이에서 중국 견제 움직임을 가속하는 것 역시 남중국해 등의 해상권의 보호에 적지않은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사태진전을 주시하고 있음.

아. 중·러 관계

● <시진핑-푸틴 전화...한반도 문제 협의>(6/16 연합뉴스)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5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전화통화에선 또 시 주석의 지난 7~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음.
- 시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양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모스크바 중·러 정상회담의 정신을 살려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투자, 에너지, 문화, 사법, 안보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과 공동보조를 심화하겠다고 밝혔음.
- 또 시 주석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국제경제포럼 개최를 지지하는 등 국제 사안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우정과 신뢰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따라 지역 및 국제 주요 현안에 대해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양국관계가 전에 없이 긴밀해지고 있다면서 양국관계 강화는 장기적인 전략적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음.
- 푸틴도 시 주석과의 건설적 우호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 정기적으로 교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 기. 타

- <“일본 전쟁범죄 논란, 역내 안보협력 장애물”>(6/12, 연합뉴스)
 - 최근 아베 신조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 정치권 일각의 우경화에 대한 논란이 역내 국가들의 안보협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됐음.
 - 11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신국가안보센터(CNAS)에 따르면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프로그램 선임 고문은 최근 발간한 '아시아 권력망의 부상(The Emerging Asia Power Web)' 보고서에서 아태지역 안보협력의 도전과제로 과거사 및 영토분쟁 문제를 지목했음.
 - 보고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문제는 역내에서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논란이 되는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촉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음.
 - 특히 "이 문제는 한일 양국간 안보협력을 거의 탈선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무산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음.
 - 또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과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은 역내 외교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이 정치적으로는 안보협력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안보협력은 양자 관계를 통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음.
 -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불투명한 미래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역내 국가들이 각자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험분산' 전략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음.
 - 이어 보고서는 역내 안보협력 노력을 훼손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중국의 군(軍) 현대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불법 어업, 해적, 테러, 마약무기 거래, 인신매매 등을 꼽았음.
 - 이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한 한반도는 잠재적인 발화점"이라면서 "특히 경험이 없는 북한의 새 지도부와 이른바 '벼랑 끝 전술,' 무기개발 프로그램으로 긴장은 한층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음.
 - 보고서는 이밖에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협력이 중국의 부상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에 나선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스노든 "미국, 2009년 이후 중국에 수백 건 해킹">(6/13, 연합뉴스)
 -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29)이



- 미국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해킹 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온라인판은 스노든이 이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국가보안국(NSA)이 2009년 이후 홍콩과 중국의 표적 수백건에 대해 해킹을 해왔다"고 밝혔다고 13일 보도했음.
 - 미국 출신인 스노든은 NSA의 외주 컨설팅 업체에서 IT(정보기술) 담당자로 일하다 NSA의 국내외 첩보 감시망에 대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했음.
 - 스노든은 NSA의 대(對)중국 해킹 작전에 대한 문서를 SCMP에 공개하면서 "미국은 이미 개별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고서도 수십만 건의 온라인 통신내용을 엿볼 수 있는 기간 통신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이 해킹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전산망을 연결하는 거대한 라우터(router) 장비와 구조가 유사하다면서 미국이 홍콩에서는 대학과 학생, 기업, 공직자를 표적으로 해킹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서는 미국 정보 당국이 중국의 군 통신망을 해킹했다는 내용은 없음.
 - 이에 앞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미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NSA는 세계 각지에서 전화·전산 첩보를 캐내면서 각 국가에서 얼마나 첩보를 수집하는지를 초록색에서 빨간색까지 색깔별로 분류했음.
 - 이 문서에서 중국은 비교적 첩보 수집 강도가 높은 '노란색' 국가로 나타나 미국이나 이라크와 등급이 같았음. 스노든은 NSA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해킹 작전이 6만1천 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 스노든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정보망에 대해 도청·감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위선을 드러내고 싶었다"며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
 - 그는 "난 반역자도 영웅도 아니고 일개 미국인이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믿으면서 선의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 스노든은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지면 반역죄로 중형을 받을 것으로 보임.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중국, 대만, 베트남 등으로 망명해야 할 처지
 - 스노든은 앞서 아이슬란드에 망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정작 아이슬란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음.
 - 그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내가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훈련받은 역량에 의존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다. 각국 정부가 망명 희망자를 처벌하려는 미국 당국의 위협을 거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음.
 - 또 러시아가 자신의 망명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저 미국이라는 거대 권력에 위축되지 않으려는 정부가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만 말했음.
 - 스노든은 일단 홍콩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청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음. 그는 "내 의향은 홍콩 법원과 시민이 내 운명을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나로선 여러분의 시스템(홍콩 사법체계)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SCMP는 스노든의 소재를 확인해 그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인터뷰 장소와 경위는 스노든의 요청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